

사회

‘보문고 사태’ 불안한 미봉책

일단 자사고 유지... 과원 해소·재정지원 수용 신입생 유치가 관건, 대규모 전학사태 우려도



비 갠 틈새 고추밭 농약
농작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단비가 내린 후 잠시 맑게 갠 16일 광주시 북구 석곡동 장동마을에서 한 농부가 고추밭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해제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던 보문고가 이를 철회하고 현행대로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사고 반납사태 14일 만이다.

광주시교육청과 보문고는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협상을 벌여 보문고가 지난 3일 제출한 자사고 지정철회서류를 거둬들이고, 학교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합의, 서명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보문고 학생 50~60명의 무더기 전학이 예고돼 있어,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행정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가중돼서다.

◇조건부 협상 타결=보문고는 시교육청과 합의에 따라 17일 시교육청에 제출한 자사고 지정철회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보문고가 자사고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과원교사 채용과 재정지원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말까지 보문고의 학급감축으로 생긴 교사 9명을 공립교사로 특채하되, 내년 3월1일자로 임용하기로 했다. 단, 보문고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일정 학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이뤄지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보문고 사태의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은 일단 ‘재정이 열악하다’는 학교측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리모델링, 시설개선비 등을 검토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보문고는 지난 3일 “자율고 지정 당시(2010년), 시교육청이 16명의 과목별 과원(過員)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다고 조건을 명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데다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자사고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전일교육감의 약속은

위법하다”며 과원교사 공채와 재정 지원을 반대했다.

◇무더기 전학사태 우려=보문고 학생들의 무더기 전학사태는 또 다른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학년 학생들이 주축으로, 이들은 전학요건(6개월 1학기 이수)이 충족되는 오는 20일 1학년(이수)이 총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파악한 전학 인원만도 40여명을 넘고,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미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전학 희망학교를 고집하고 있어, 시교육청으로서는 배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점쳐진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로 학급감축과 과원교사 발생, 재정난 가중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오는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도 우려된다. 자사고의 특성상 학생들의 납부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청은 자사고 반납사태라는 급한 불을 끄지만, 교사 공채 특혜시비, 타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극한 대치 선례 남겨=보문고는 시교육청의 과원교사 16명 채용약속 불이행, 재정난 가중으로 자사고를 반납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 시교육청은 “전일 교육감의 교사 특채 약속은 위법”이라며 원칙을 지켰지만, 자사고 반납사태의 한 당사자가 됐다.

결국, 양측의 줄다리기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전학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경이 됐다. 학교에 남기로 한 학부모들은 한차례 자사고 포기를 선언한 학교가 교육에 충실할지 회의적이다. 전학을 결심한 부모들도 환경변화에 자녀들이 잘 적응할 지 좌불안석이다.

교육계에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망각한 탓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계에서 또 다시 극단적인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행태가 되풀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원침 (8633) 김종두



이호균 전 도의장 지역 4년 구형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호균(50)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지역 4년이 구형됐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고 보조금 횡령행위를 엄단하고 사학재단의 구조적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독서실 화장실서 물가 짝다 덜미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 하려던 20대 재수생이 ‘찰카’ 소리 때문에 덜미.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재수생 이모(20)씨가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고생 A(17)양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찍으려 했다는 것.

○...경찰은 이씨가 촬영 사실을 들켜자 화병을 지우는 등 시간을 끌다가 A양의 항의를 받고 모든 사실을 시인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관에게 “짹새”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16일 경찰관을 ‘짹새’라고 부른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소란 행위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고도 지구대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데 얽힌 처벌이 필요하다”며 “박씨가 초범이고 모욕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3시께 경기 군포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짹새가 뭐데”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에게 ‘짹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장마 특타 환경오염 배출 42곳 적발 13곳 고발

장마기간을 틈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환경당국

에 적발됐다.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한 달 간 광주·전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7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42곳(위반율 16%)을 적발, 13곳을 고발하고 나머지 29곳을 관찰기관에 통보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상임이사 부탁한다” 돈 건넨 농협지점장

북부경찰, 5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6일 단위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되기 위해 농협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농협 M지점장 강모(56)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5월25일 광주시 북구의 모 아파트에 사는 이사 박모(62)씨를 찾아가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단독 추대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다른 이사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7월 상임이사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위 농협 상임이사직은 이 사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출된 뒤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를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는 최종 후보자로 확정돼 대의원 총회에서 가부결정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에 1억3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학교·가해학생 부모 등에

지난해 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된 법원이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광주지역 소송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군이 다니는 학교 교

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위반으로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권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유족들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모두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 형 1,2종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